



電機工業— 무엇이 問題인가?

裴 秉 杰

每日經濟 産業部長

1. 無制限 급성장

電機工業은 지난 70년대를 통해 매우 성공적인 急成長期를 보냈다.

電氣工業의 성장은 電氣需給 사정의 好轉에 직접 영향을 받았고 국민의 文化生活 향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우리는 50년대 말까지 電氣공급이 딸리는 시대에 살면서 電燈 한등 켜는데 은 신경을 집중시켜야만 했었다. 그러다가 60년대를 넘어가면서 無制限 送電이 단행되자 가정용 電氣製品을 마음놓고 쓸 수 있게 된 것을 문화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電氣工業성장은 산업적 비중도 높지만 국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큰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電源開發에 우선권이 주어진 것도 이같은 산업적 특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電機工業이 담당하고 있는 넓은 영역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電機工業은 電源開發用 각종 기기를 비롯하여 산업용 送配電設備 엘리베이터같은 電動운반설비, 冷藏庫나 扇風機와 같은 家電用品, 電球類를 망라한 照明機器 그리고 電力제품과 通信 분야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電機工業의 획기적 성장은 64년도의 無制限 송전과 이듬해에 제정된 농어촌 電化促進法이 뒷받침했다.

전국농어촌에 전기가 공급되자 선풍기가 바람을 날리며 지방으로 팔려가고 냉장고 산업이 開花했고 각종 조명기구가 날개를 달고 양산되었다. 또 산업면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설비와 기기가 국산으로 代替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밀려와 유명무명 기업들간의 투자경쟁, 개발경쟁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지난 70년대 高度성장기 동안 電機工業분야에 일어난 일대 投資붐은 수많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고성능, 대용량제품시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78년까지 高成長을 지속해오던 電機工業이 79년부터 갑자기 생산과 소비의 둔

화로 현상유지마저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그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電機工業 자체로서는 오랫동안 중단없이 강행군해온 擴張과 成長의 한계점에 도달했었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각사가 경쟁적인 입장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왔고 투자의 효율을 選別할 겨를도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서로 책임지겠다는 自負心이 과욕이었고 과투자를 결과했기 때문이었다.

2. 過投資의 부담

業界에서는 79년 하반기부터 생산과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자 不況을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不況이 전반적으로 몰려오고 있을 때였으므로 업계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모든 것을 不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스스로 내부에 응크리고 있는 非生産的 투자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마련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電氣工業의 평균가동율은 매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78년, 94.4 79년 99.4였다가 80년 중반에는 무려 85로 떨어졌다. 또 정부통계에 의하면 電氣工業의 生産能力 지수는 76년을 기준으로 79년 2.3배, 80년 2.5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 두가지 통계는 電機工業이 매우,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여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들 통계는 70년 중반부터 급격한 시설확장이 생산과 수요를 크게 앞질러왔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한창 好況일 때 착공한 각종 시설이 79년 경기악화를 맞을 때쯤 완공되어 시설과잉과 판매부진의 진통을 맞게 되었다는 풀이가 된다.

이 시점에서 왜 過投資가 일어났느냐는 일을 따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책적으로 重複投資를 재조정한 마당에 그 원인을 다시 캔다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의 제기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過投資가 가장 심각한 重電機 분야의 경우를 보면 한번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조정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교훈적 의미가

있다.

重電機는 과거 부실기업으로 문제되었던 韓永工業을 暁星이 인수하면서부터 대기업의 격전장으로 바뀌어 오늘의 過投資 현상을 가져왔다. 호성에 이어 雙龍과 코오롱이 기존업체를 각각 인수하여 시장분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실행행사에 나서 기존업체와 마찰이 생겼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전공해 온 利川電機를 비롯하여 新韓電機, 大明重電機 등은 뒤늦게 참여한 대기업들에게 그들의 영토를 고스란히 물려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겨야 안심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존업체들의 영토는 많이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暁星을 선두로 하여 雙龍과 코오롱의 독점적 생산분야 싸움은 投資規模의 대형화 경쟁으로 바뀌었고 정부의 조정도 3社의 주장에 크게 영향받으며 몇차례 변경되었다. 게다가 대단위 조선소를 경영하고 있는 現代그룹이 重電機 분야에 참여하고 金星計電이 154kV 급에 참여함으로써 관계 당국의 투자조정만으로 구획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重電機는 가장 악성 중복투자 분야로 낙인이 찍혔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를 조정할 수 없었다. 대체로 국내수요의 3배가 넘는다면 엄청난 過投資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서로 대형 투자로 重工業立國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자랑을 일삼았던 것이다.

3. 利害相反된 統合調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두번째 重化學투자를 조정하면서 이 분야에 과감한 구획정리를 단행했다. 이 조정은 근본적으로 過投資를 회수해 내지는 못했지만 경쟁적인 無分別 투자가 얼마나 그룹에 타격을 미쳤는가를 절실히 비파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정부조정에서 154kV 급 이상 重電機 생산은 暁星重工業에 일원화시키고 코오롱과 雙龍은 이에 흡수통합시켰다. 또 現代는 수출용과 선박용만 생산한다는 제한적 영토를 부여하고 金星計電을 비롯하여 利川, 新韓, 大明 등은 모

두 154kV 급 이하 전문업체로 각자 분야를 개척토록 구분시켰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효성은 코오롱, 雙龍과 先引受 後精算 방침에 승복, 합의를 교환하고 통합경영에 나섰다. 다른 회사들도 모두 정부방침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대용량 시장은 넘겨보지 않고 전문업체로만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投資가 진행된 후의 法人통합이란 쉽지 않았다. 投資의 외형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로 집계되지만 하나의 경영체로 바꾸고 보면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 엇갈려 헤쳐나가기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은 公開기업으로서 소액주주 처리문제가 있고 인수회사에 대한 精算도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인수기업의 精算에는 무형의 영업권을 평가해야 하고 종업원 처우도 어려운 과제이며 3者の 뜻을 살피는 경영진 구성도 완벽을 찾지 못한 대단히 어렵다.

이같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현재까지 잘 처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내부의 진실은 밖에서 들여다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4. ESS 熱戰의 교훈

重電機와 비슷한 亂戰을 벌여온 電子交換機(ESS) 분야도 끝내 정부의 투자조정을 받고 구획정리가 된 셈이다. 그러나 ESS 투자조정은 종전 기계식 통신시대의 2원화체제를 사실상 4원화한 결과를 빚었다. 이 과정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의 ESS진출을 두고 힘의 대결을 벌여온 재계의 끈질긴 입김이 작용했었다고 볼 수 있다.

ESS 싸움은 정부가 출자한 韓國電子通信이 제 1기종을 말도록 한 公營制로 첫 결론이 났지만 이는 최종결론이 아닌 투자조정의 유보였다. 얼마뒤 ESS 제 2기종 선정을 위한 실력자간 싸움이 再開되었을 때 바로 1기종 때 유보되었던 미결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해 제 2차 重化學 투자조정의 결과 美웨스턴일렉트릭社의 제 2기종 ESS 생산은 金星 半導體가 맡고 韓國電子通信의 제 1기종은 三星通信이 인수토록 구분함으로써 金星과 三星간의 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通信産業 최선구자인 東洋精密과 과거 10여년 이상 끌어오면서 크로스바 교환기를 생산하고 있는 大韓通信에 대한 예우가 남았다. 그래서 東洋精密은 농어촌 전자교환기의 독점 생산권을 부여하고 大韓通信은 크로스바의 장점인 기계식 私設構內交換機의 독점 생산권을 주었다.

이 결과 EMD와 스트로자의 構內交換機의 생산은 중단되고 大韓通信이 당분간 시장을 개발, 어느 정도 기업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 東洋精密도 곧 기종선정이 끝나면 농어촌 전자교환기 생산업체로서 새로운 지위를 개척하여 金星과 三星에서 敗北를 자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ESS 투자조정이 완전히 4원화 체제를 구축시켜 줌으로써 과거 기계식 2원화체제에 비해 영토구분을 細分化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축적이 시급한 통신분야의 전문화 체제보다는 경쟁을 制限하기 위해 업계의 희망에 정책을 맞춰준 느낌이 없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5. 高成長의 內容不實

성장기의 電機工業은 엄청난 국내 수요의 수입 대체효과와 수출산업화를 터놓고 자랑할 수 있었다. 電機製品의 수급실적을 보면 年 16~17억달러 상당이 수입데고 있지만 수출도 이 수준을 넘고 있다. 또 주요품목의 국산화는 생업기술의 개발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주요제품의 國產化 率은 發電機 70%, 電動機 85%, 變壓器 60%, 開閉機 9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치로 나타난 공식 國產化率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반적으로 국제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업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 대

체로 國產化 품목의 기술수준은 아직도 개발기초에 있거나 한단계 때를 넘긴 후발 제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자재 부문에서는 전기동을 비롯하여 철강관류, 주철, 절연지, 애자류 및 베어링과 볼트 너트에 이르기까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국산화했다. 그러나 변압기는 아직도 30%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용 콘덴서의 경우는 수입의존도가 80%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이처럼 電機工業의 급속한 성장을 자랑스럽게 평가하면서도 내용의 不實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산업의 구조적 脆弱性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電氣工業의 총체적인 규모를 따지면 산업적 비중에 두 불구하고 기업의 濶細性과 施設의 노후, 기술수준의 低位라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의 60% 상당이 총자산 규모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나타났고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계획생산을 못하고 주문만 기다리는 경영을 면치 못한다. 계획생산이라고 해도 판로를 개척할 능력이 없고 보면 不況을 이기는 經營力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기술에 있어도 유명기업들은 저마다 최고 최신키술을 습득했다고 자랑하지만 선진국을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놓여있다. 이는 선진국이 완전기계화한 부문을 거의 手動化하고 있거나 機械化한 정도에 불과한 工程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지난 70년대를 통해 電機工業 분야에 기술도입이 왕성했던 것은 그만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 기술도입은 제품개발용 설계도에서부터 제조 시설과 원자재 부문은 물론 기술지도 등의 형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도입기술의 절대액이 日本기술이었다. 日本이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美國,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도입기술의 내용을 간단히 평가하기는 쉽지만 대체로 源泉기술이다. 최신 기술은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이 전성기를 넘겼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낡은 기술

이었다는 평가가 여러 기관에서 나왔었다.

그것은 最新技術의 도입능력도 문제였지만 설령 들여온다해도 消化吸收力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電氣業界는 이들 낡은 기술을 도입하고 대체로 매상고의 2.5~3%의 로얄티를 지불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7%의 로얄티를 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도입기간은 3~7년이 대부분이고 종종 10년짜리도 없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차단기를 비롯하여 전동기와 변압기 기술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70년대말부터 80년에 들어서면서 기술도입 조건은 보다 까다로워졌다.

대체로 3% 정도의 代價외에 상당액의 선불금마저 지불하는 조건 아니면 기술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核心的이고 源泉的인 기술을 조건여하에 상관없이 내놓지 않는 것이 기술보유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6. 無抵抗의 경영방식

電氣工業은 70년대의 성장기 동안 확장경쟁 이외에는 자기비판의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다. 확장기의 정부산업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投資意慾을 높게 하는 갖가지 誘引策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데 최선의 保護策을 펴주었다. 그러다가 不況을 맞아 시설은 남고 부채는 무겁고 시장은 凍結되고 經營은 저항력을 잃고 말았다.

經營力이란 실상 不況일 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힘이라고 본다면 電機工業은 不況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經營力으로 확장기를 보냈다가보다는 정부보호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에 스스로 經營力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不況앞에 모두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지원만을 계속 호소하는 것이 脫不況대책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지난 79년부터 지금까지 업계의 호소로 나온 대정부 지원요망 사항을 보면 受注는 없고 판매는 안되고 가동율은 떨어졌고 자금난에 골리

마저 부담할 수 없으니 정부가 대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도와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금을 풀어달라는 주장이다. 운전자금에서부터 노후시설 개체자금 원자재구입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내용의 자금 요청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전면적인 不況으로 산업성장이 위축되고 있을 때 정부는 빨리 손을 쓰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電氣工業의 不況資金을 별도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80년에 들어서면서 倒産하는 기업은 救濟해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정책의 변화를 가르켜 주었다. 쓰러지는 기업 또는 쓸어질 수 밖에 없는 기업을 전제출 자금은 정부에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로 하여금 도와줄 가치가 있고 救濟해야 할 정책적 표적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7. 自力自強의 길

지난 65년 12월에 제정된 農漁村 電化促進法 이래 機械工業振興法, 電子工業振興法 등이 제정되고 電氣工業 育成方案과 機械工業 育成계획이 마련되고 重化學工業 선언이 있는 것이 모두 電機工業의 성장진로를 터준 일련의 정책적 방안이었다.

실제로 60년대 중반 重電部門에서 소용량·변압기를 비롯하여 通信 케이블과 전압계를 개발하고 선풍기와 냉장고를 국산화한 이후 지난 79년 345kV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한 것도 이같은 정책발전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電氣工業은 스

스로 헤어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不況 대책과 장기적인 成長대책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內需가 안되면 수출로 살길을 뚫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아직은 해외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어렵다. 그동안 투자가 가장 많았던 重電氣 분야가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결국 경제의 원론만 내세워 自力自強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각종 자금지원은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또 한편 정부로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도와줄 것인가를 정부는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電機工業은 유달리 제품의 다양성과 전문성과 함께 정밀성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電機工業을 분야별 경영규모의 適正單位를 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분야를 조정해 주는 일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생산기반의 정비를 통한 시설개체와 近代化도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自主技術의 개발과 最新技術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업계가 주장하는 金融支援은 전문분야를 책임진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官需품목의 事前發注나 해외시장 개척비의 지원을 통한 輸出促進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스스로 體質強化에 전력 투구하여 生存의 기반을 自力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前進대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냉철한 상황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